

“유초중고 교육 시도교육청 이양해야”

김승환 교육감,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이자 교육개혁 핵심… 공약이탈 조짐 땀 과감하게 저항할 것”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초·중·고 교육을 교육부 손에서 완전히 떼어내 시도교육청에 넘겨줬다고 한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이 공포정치를 기본 통치술로 삼았던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과 계속 충돌했다. 두 정권이 헌법 위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약속은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교육 공약, 그 중에서도 핵심인 유·초·중·고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고 하는 공약을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개혁의 핵심은 결국 교육과정, 수업, 평가 권한을 교사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그 귀착점에 이르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되고 교육감 자신도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유·초·중·고 교육을 교육관료들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약 공약이탈의 조짐이 조금

이라도 보이면 그때는 과감하게 저항하겠다. 필요하다면 청와대 앞에서 매일 1인시위라도 할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도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문재인정부 개혁에 대한 저항은 이미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개혁저항의 카르텔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대한민국을 개혁하지 못하면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면서 “필요하다면 교육감 위치에서 개혁저항에 맞서는 액션을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서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최근 타시도에서 논란이 된 사립학교 성매매 교사의 정직 처분 후 학교에 복귀하는 유사사례가 전북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학년도 학급수 감축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교원 성과급제는 대표적인 교육적폐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폐기된 만큼 교원 성과급제도 하루속히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은 기자



포용 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을 예방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포용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공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겠다. 지금까지 원전 운영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심지어 원자로 전원이 켜지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과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을 기본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높여가겠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노후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제 일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면서 “친환경 에너지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분야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며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강경화 “북핵·미사일 문제 능동적 대처해야”

“업무 방식·사고의 틀 벗어나 쇄신 노력 선행돼야” 혁신 주문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은 19일 “우리 국민의 인위를 위협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며 시급해지는 북핵·미사일문제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업무에 대해 각자가 맡은 책임감과 전문성, 창의성, 그리고 우리 조직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제재와 대화를 모두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요국간 이해가 대치하는 동아시아에서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중국과는 당면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해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일본과는 과거를 지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러시아와도 협력을 확대해 양국 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동시에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4강과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로 우리의 외교를 확장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시대가 요구하는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간의 업무 방식과 사고의 틀을 벗어나 쇄신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외교부의 혁신 노력도 주문했다.

강 장관은 “업무방식의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문서작성과 결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정책결정을 위한 생산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며 “대기성 야근과 주말근무가 업무에 대한 헌신으로 평가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일은 미련 없이 정리하고, 필요한 일은 제대로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책 구상과 결정을 위한 회의가 공허한 말잔치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의견교환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이고 단선적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실·국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하는 업무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업무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조직의 유연한 사고와 대응을 유도하는 개선 방안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외교부를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근무 기강과 긴장감, 전문성은 반드시 유지하되, 업무와 개인생활 간 균형과 조화도 중시하고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 부는 여성 직원들의 일부 비율이 정부 전 부처 중에서 가장 높다”며 “일하면서 세 아이를 키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앞으로 전문성과 업무역량이 탁월할 뿐 아니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동료와는 한 팀이 돼 저를 도와 우리 부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간부진을 구성해 나가겠다”며 “보다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인적자원의 확보를 통해 조직역량을 확충하고 인사혁신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강 장관은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준비과정은 짧지만 무척 다사다난했다. 제

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임명장을 받기까지의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외교는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라고 본다”며 “그간 외교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외교정책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 취해 온 노력이 충분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강 장관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외교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회와 언론은 물론,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힘써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직원들에게는 “저는 여러분의 동료 강경화로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밖으로 나가 다양한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며,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직원들이 긍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출퇴근 재해, 내년부터 산재 인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9일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단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

민주당, ‘文대통령에 막말’ 한국당 간부 고발기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주 나쁜 놈, 강개 같은 놈’이라고 언급한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장위원장을 20일께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박원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과 막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시장 당선 이전 개소식에서 “상대는 이주 나쁜 놈, 강개 같은 놈”이라고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뉴시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우구초 교사)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급자리'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